

## 신보호주의와 세계무역체제\*

박지형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아시아-글로벌 경제질서센터장

---

본 논문은 국제무역 · 통상 분야의 연구들을 통하여 세계무역체제 발전 및 신보호주의 등장의 배경을 살펴본 후, 이 연구들의 분석들을 이용하여 세계무역체제 및 신보호주의의 미래를 전망한다.

주제어: 신보호주의, 세계무역체제, WTO, GATT, 특혜무역협정, 교역조건이론, 중간선거권  
자이론

---

\* 본 연구는 연구재단의 연구비(NRF-2014S1A3A2043505)와 2017년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의 아시아연구기반구축 사업(#SNUAC-2017-008)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

## I. 서론

저자는 국제무역·통상 분야의 중요 연구들을 통하여 세계무역체제 발전 및 신보호주의 등장 배경을 살펴보고, 이 연구들의 분석들에 입각하여 세계무역체제와 신자유주의의 미래를 전망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방대한 관련 연구들에 대한 서베이(survey)가 아닌 몇 편의 중요 논문들의 이론 틀과 실증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세계무역체제의 현황 및 신보호주의 등장을 이해해보려는 시도가 될 것이다.<sup>1</sup> 또한, 세계무역체제 및 신보호주의에 대한 전망과 관련하여 이 논문을 통해 확실한 답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살펴볼 연구들이 제공하는 분석들을 통하여 어떤 예측을 해볼 수 있는가를 논의할 것이다.

II장에서는 다자주의 무역체제의 발전과 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 및 실증분석 연구들을 살펴보고, 다자주의 무역체제의 정체 및 특혜무역협정의 확대에 대해서도 간략히 살펴본다. III장을 통해 저자는 최근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신보호주의”의 성격을 규정하고 그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들을 검토한다. IV장에서는 앞서 논의된 연구들에 근거하여 신보호주의 및 세계무역체제의 미래를 전망한다.

## II. 다자주의 무역체제의 발전과 정체 및 특혜무역협정의 확대

세계무역체제 혹은 국제무역체제는 국제무역 및 국제무역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협정 및 국제법, 그리고 각국의 통상관련 법률 및 관행을 중심으

---

1. 세계무역체제에 대한 최근 서베이로 *Handbook of Commercial Policy* (Bagwell and Staiger [eds.], Amsterdam: Elsevier, 2016)가 지난 20~30년간 진행된 관련분야 연구들에 대한 북챕터(book chapter)들을 담고 있다.

로 이루어진 국제무역질서를 총괄해서 지칭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심에는 다자간 무역협정인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가 있다. 1995년 발족한 WTO는 그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체제 하에서 진행된 우루과이 라운드(Uruguay Round: 1986~1994) 협상을 통해 만들어졌는데, GATT·WTO 체제의 성립 및 발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간략히 정리해 볼 수 있다.<sup>2</sup>

GATT 체제는 제2차 세계대전을 끝내며 미국을 중심으로 전승국들이 구축한 브레튼 우즈(Bretton Woods)체제의 한 축(다른 두 축으로는 국제금융과 관련된 국제기구로 출발한 International Monetary Fund와 World Bank가 있음)으로서, 세계경제질서 중 국제무역질서의 구축 및 유지를 위한 다자간 협정체제였다. 1947년 23개국이 참여하여 출발한 GATT 체제는 그 후 7번의 협상 라운드를 거쳐 150개국이 참여한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해 WTO 체제를 발족시켰으며, WTO는 현재 164개의 회원국으로 구성된 다자간 협정으로 국제무역질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sup>3</sup>

GATT·WTO 체제는 1930년대 대공황을 거치며 매우 높아져 있었던 다양한 보호무역장벽을 관세장벽으로 최대한 일원화(tariffication)하는 동시에 모두 8차례에 걸친 다자간 협상을 통해 이러한 관세를 “상호주의 원칙(reciprocity principle)”과 “최혜국대우 원칙(Most Favored Nation Principle)” 하에 큰 폭으로 낮춤으로서 전 세계적인 자유무역의 확대에 기여하여 왔다.<sup>4</sup> GATT·WTO 체제의 이러한 성공에 어떠한 메커니즘이 작동한 것인지에

2. WTO를 발족시킨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는 한국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데,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박태호 교수가 당시 1993년 3월부터 1994년 6월까지 대통령 경제수석실의 수석경제학자(senior economist)로서 우루과이 라운드를 결정짓는 마지막 과정에서 한국의 협상 포지션을 총괄하는 역할을 한 바가 있다.

3. GATT·WTO 체제의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Sykes(2016)가 포괄적인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4. 관세의 적용에 있어서 회원국들의 수출에 대하여 차별적인 관세의 적용을 금지하는 최혜국대우 원칙이 “GATT Article I”로 명문화 되어있는 것에 반하여, 상호주의 원칙은 명문화 되어있는 원칙은 아니다. 하지만, Bagwell and Staiger(1999a)가 강조하는 바와 같이 관세협상에 참여하는 회원국들이 상호 수출확대의 규모가 같거나 비슷하도록 관세인하를 주고받는다라는 의미의 상호주의 원칙은 GATT 하의 관세인하 협상에 있어서 중심적인 원칙으로 작동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하여 지난 20~30년 동안 많은 이론 및 실증적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이를 설명하는 중심적인 이론으로 자리를 잡은 Bagwell and Staiger(1999a)의 “교역조건이론(terms-of-trade theory)”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국제무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무역정책에 대하여 협정국 간 상호 제한을 두는 것이 무역협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협정은 각국의 무역정책이 다른 국가에 미칠 수 있는 외부성(externality)을 협정을 통해 내재화(internalize)하기 위한 것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교역조건이론에 따르면 무역협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무역정책의 외부성은 오직 보호무역정책에 수반되는 교역조건의 외부성(terms-of-trade externality), 즉 관세증가가 수요량 감소를 통해 수입제품의 국제가격을 낮춤으로써 수출하는 국가에 피해를 주는 외부성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보호무역정책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많은 학자들은 이를 위한 국내의 정치적 압박에서 그 원인을 찾아왔다. 교역조건이론에 의하면 만일 각국이 교역조건의 외부성을 무시하는 상태에서 보호무역정책의 수준을 결정하는 경우 무역협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무역정책의 외부성은 존재하지 않게 되고 무역협정의 경제적 존재이유 또한 없어진다.<sup>5</sup>

교역조건이론은 또한 GATT·WTO의 상호주의 원칙과 최혜국대우 원칙이 회원국들로 하여금 교역조건의 외부성을 내재화하는 협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보여준다.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무역협상에 임하는 경우 이를 통해 결정되는 각국의 보호무역수준이 교역조건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됨으로, 교역조건의 외부성에서 자유로운 즉 이를 성공적으로 내재화한 보호무역수준이 선택되게 된다. 최혜국대우 원칙은 다자간 무역을 하는

---

5. 교역조건이론이 처음 제시되었을 때 많은 학자들이 이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을 갖은 이유는 각국이 보호무역수준을 결정할 때 교역조건에 대한 고려보다는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 결정할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보호무역수준이 정치경제적(political economy) 고려에 의해서만 결정되고 교역조건이론도 옳다면, GATT 등을 통하여 국가 간 무역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없고, GATT·WTO와 같은 무역협정의 경제적 가치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 하지만, 추후 논의될 여러 실증분석 연구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각국이 일반적으로(무역협정 등을 통해 조정을 하지 않고) 결정하는 보호무역수준은 해당국가가 보호무역정책을 통해 교역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관련 상품에 대한 해당국가의 세계시장 수요독점력)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우에도 각국 무역정책의 외부성이 교역조건의 변경을 통해서만 작동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상호주의 원칙과 결합하여 성공적인(교역조건의 외부성을 내재화 한) 다자간 무역협상이 가능하도록 한다. 교역조건이론은 더 나아가 무역협정을 통해 조정해야 하는 주된 정책이 관세정책과 같은 무역정책이며, 각종 세금이나 보조금과 같이 교역조건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국내정책들은 무역협상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즉 GATT·WTO와 같은 “낮은 수준의 무역협정”이 최적의 무역협정임을 증명한다.<sup>6</sup>

무역협정의 역할에 대해서는 교역조건이론 이외에도 중요한 이론들이 존재한다. 무역협정에 대하여 Maggi and Rodriguez-Clare(1998, 2007)는 국내 기업들이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기대해 수입경쟁산업에 불가역적으로 과다 투자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내적 약속(domestic commitment)의 역할을 한다는 이론을 제시한다. Ossa(2011, 2012)는 수입관세의 증가가 보다 많은 기업을 국내로 이전시켜 생산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국내의 상품가격이 하락시키고 외국의 상품가격은 증가시키는 외부성, 즉 기업이전의 외부성(firm-delocation externality)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교역조건의 외부성 이외에도 무역협정을 통해 내재화가 필요한 무역정책의 외부성이 존재한다는 이론을 제시한다. 하지만, GATT·WTO 원칙들인 상호주의 원칙과 최혜국대우 원칙, 무역정책에 대한 협상에 집중하는 낮은 수준의 무역협정, 그리고 무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내정책의 도입에 대해서는 협정위반이 없는 무효화 혹은 손상에 대한 제소를 통해 해결하는 방식 등, GATT·WTO 무역협정의 중심적인 특징들이 이 체제의 성공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가장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은 교역조건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다양한 실증분석들은 교역조건이론의 예측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Broda, Limao, and Weinstein(2008)은 WTO 비가입국들의 경우에만 비탄력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에 대해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것을 실증분석을

6. 단, 국내정책의 변화가 무역협정을 통해 기대되었던 시장접근성에 영향을 주는 경우 무역정책을 재조정하여 기대되었던 시장접근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Bagwell and Staiger(2001)는 이러한 무역정책의 재조정이 GATT·WTO 체제 하에서 명문화되어 있는 “협정위반이 없는 무효화 혹은 손상에 대한 제소(non-violation nullification-and-impairment complaint)”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통해 보인다. 이는 보호무역정책이 교역조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가 각국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결정하는 경우에만 존재하며, WTO 협상을 통해 결정되는 관세의 경우 이러한 고려가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는 교역조건이론의 예상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Bagwell and Staiger(2011)는 WTO 가입 시점이 1995년 이후인 중국과 같은 국가들의 가입 전 관세율과 가입 후 관세율을 비교하여 이들 국가들의 관세율 하락이 교역조건이론의 예상에 따라 일어났음을 보여준다.

교역조건이론과 관련된 실증분석연구들은 20세기 후반에 일어났던 GATT·WTO 체제가 성공적인 다자간 무역협상을 어떻게 이끌어 내었으며 이를 통하여 세계무역의 확대 및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었는가를 설명한다. 하지만, 21세기에 들어선 후 WTO 체제 하에서 추진된 다자간 무역협상인 도하 개발 라운드(Doha Development Round: 2001~?)는 10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무역협정을 이끌어내는데 실패하였다. 이에 반하여 특혜무역협정(preferential trade agreement)은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확산되어 WTO가 발족한 199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20여년간 400개 이상의 특혜무역협정이 체결되어 WTO에 통보되었다. 1948년부터 1994년까지 5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GATT에 124개의 특혜무역협정 체결이 통보된 것에 비교하여, 21세기에 들어서면서 훨씬 빠른 속도로 많은 특혜무역협정이 체결되고 있는 것이다.

특혜무역협정의 확산이 반드시 다자간 무역협정인 WTO 체제에 대한 위협이라고 볼 수는 없다. 특혜무역협정이 GATT·WTO 체제의 중요한 원칙인 최혜국대우 원칙을 위배하고 있으나, GATT·WTO 체제 자체가 이 원칙에 대한 예외조항을 두어 특혜무역협정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GATT·WTO 체제는 회원국의 특혜관세부과와 관련하여 특혜무역협정의 당사국 간 대부분의 상품에 대하여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내지 관세동맹협정(Customs Union, CU)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혜관세부과를 허용하고 있다.

특혜무역협정이 GATT·WTO 체제 하에서 허용되는 협정이라는 것 이외에도 특혜무역협정체결이 GATT·WTO 체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주장들도

존재한다. Richardson(1993)과 Bagwell and Staiger(1999b)의 분석에 의하면 특혜무역협정은 그 당사국들로 하여금 비회원국들에 대해서도 “관세 보완성(tariff complementarity)”을 통하여 최혜국 관세를 낮추도록 유도 할 수 있다. Ornelas(2005)의 연구는 특혜무역협정이 보호무역정책과 관련된 “지대 파괴 효과(rent-destruction effect)”를 통해 최혜국 관세를 낮추게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특혜무역협정이 특히 관세동맹의 경우 비동맹국가들에 대한 동맹국가들의 시장 독점력을 강화시켜 비동맹국가들에 부과하는 관세를 높이도록 할 수 있다는 이론들도 존재하며, 특혜무역협정의 복잡성과 원산지 규정 등의 존재로 인해 이러한 협정이 글로벌 자유무역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sup>7</sup>

다자간 무역협정인 GATT·WTO 체제와 21세기에 급속도로 확산된 특혜무역협정의 관계가 과연 상호보완적인 관계인가 아니면 다자간 무역협정은 그 역할을 다하고 특혜무역협정들이 세계무역체제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대체적 성격을 지니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Bagwell, Bown, and Steiger (2016)이 자세히 논의한 바와 같이 아직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체결된 특혜무역협정들은 단지 협정당사국들 간 무역장벽이 되는 모든 보호무역정책을 없애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무역정책 이외에도 투자정책, 환경정책, 노동정책 등 국내정책들에 대한 협상과 협정을 함께 체결하는 “높은 수준의 협정”을 지향하고 있다. 비록 다음 장에서 논의될 신보호주의의 등장으로 인하여 미국이 비준이전에 탈퇴를 결정했지만, 2016년 2월 관련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은 높은 수준 협정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일본과 같은 거대 경제권이 참여하는 이러한 메가(mega) FTA의 등장은 무역정책에 대한 협상에 집중하는 “낮은 수준의 협정”인 GATT·WTO 협정과 차별성을 보여주면서, 새로운 세계무역체제의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였다.

---

7. 관세동맹의 시장 독점력 강화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논문이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를 촉발시킨 논문으로는 Kennan and Riezman(1990)과 Krugman(1991)의 연구가 있다.

교역조건이론에 따르면 관세정책과 같은 무역정책에 협상을 집중하고, 교역조건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국내정책들은 무역협상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GATT·WTO와 같은 낮은 수준의 무역협정이 최적의 형태이다. 그렇다면 왜 최근의 특혜무역협정은 높은 수준의 협정을 추구하고 있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Antràs and Staiger(2012a, 2012b)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해외업무위탁(offshoring)”과 특화된 중간재 교역의 증가는 중간재의 가격이 “시장청산조건(market clearing condition)”에 따라 경쟁적으로 결정되기보다 특화된 중간재에 대한 상호독점력이 있는 수요기업 및 공급기업간의 협상력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한다. 이러한 경우 교역재 관련 비용을 교역국에 추가로 전가(즉, 교역조건을 유리하게 변경)시키는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정책은 더 이상 관세 등의 무역정책이 아니며, 오히려 적절한 국내정책이라는 것을 Antràs and Staiger의 분석이 증명하고 있다. 교역조건을 유리하게 바꾸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정책이 무역정책이고 이와 관련된 무역정책의 외부성이 무역협정을 통해 해결해야(내재화)할 유일한 문제일 경우에는 교역조건이론의 주장과 같이 무역정책에 초점을 맞추는 낮은 수준의 무역협정이 최적일 수 있다. 하지만 해외업무위탁과 특화된 중간재 교역이 증가하면, Antràs and Staiger의 분석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각국은 무역정책이 아닌 국내정책을 통해 특화된 중간재 관련 교역조건을 자국기업에 유리하게 바꾸려 할 것이고, 이 경우 최적 무역협정의 형태는 국내정책의 외부성 문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높은 수준의 무역협정으로 바뀌게 된다.

최적 무역협정의 형태에 대한 이 새로운 이론은 아직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왜 많은 특혜무역협정이 낮은 수준의 협정에서 다양한 국내정책들 또한 적극적으로 협상의 대상으로 상정하는 높은 수준의 협정으로 전환되었는지에 대한 이론을 제공한다. 이 논문은 IV장 “전망”에서 다시 논의될 것이다.



### III. 신보호주의의 등장과 그 배경

2016년 세계무역체제에 가장 큰 충격파를 던진 사건은 아마도 영국이 EU (European Union)을 탈퇴한 브렉시트(Brexit)일 것이다. EU는 미국과 함께 세계무역체제 형성을 주도해 온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고, 영국은 독일·프랑스와 함께 EU의 중심 국가였다. 브렉시트가 도미노 현상을 발생시켜 EU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는 2017년 5월 프랑스의 대통령 선거에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었던 이유이기도 했다. 선거 결과, 프랑스의 EU 탈퇴인 프렉시트(Frexit)을 주장한 마린 르펜이 아닌 에마뉘엘 마크롱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이러한 도미노 현상에 대한 우려는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프렉시트와 같은 극단적인 정책을 내놓은 르펜이 결선투표에서 30% 이상의 지지를 받고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50% 이상의 지지를 받았다는 사실은 브렉시트를 가져왔던 진원이 프랑스에도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2016년 11월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또한 세계무역체제에 브렉시트에 못지않은 충격을 세계무역체제에 주고 있다. 보호무역주의와 반이민자 정책을 중요한 공약으로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된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직후 TPP의 탈퇴를 선언하였고,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 및 한미자유무역협정(한·미 FTA)의 재협상을 추진하면서 이들 협정의 파기가능성 또한 제기한 상태이다.

물론, 이러한 보호무역주의가 다자간 무역협정인 WTO 체제에 대한 공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흐름이 더 강화된다면 추후에 논의될 바와 같이 WTO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보호무역주의를 “신보호주의”라고 정의하고, 신보호주의 등장의 배경에 대하여 논한다.

## 1. 신보호주의

보호무역주의는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왔다. 그렇다면, 최근 세계무역체제에 위협이 되고 있는 영국·미국 발 보호무역주의는 이전과는 매우 다른 성격을 지니는가? 또한 이러한 보호무역주의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가? 이에 대하여 저자는 “그렇다”라고 생각하며 이를 “신보호주의”라는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려고 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GATT·WTO 체제 하의 보호무역주의는 주로 산업정책(유치산업보호정책 등)의 일환으로서 개도국들이 그 중심이 되어왔다. 이에 반하여 최근에 크게 강화된 “신보호주의”는 오히려 미국·영국과 같은 선진국들이 그 중심이 되고 있으며, 단지 보호무역정책과 같이 해외에서 생산된 재화의 수입을 제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반이민정책, 반해외직접투자, 혹은 반해외업무위탁과 같이 생산요소의 국가 간 이동에 대해서도 제한을 강화하려한다는 점에서 “보호무역주의”를 넘어서서, 보다 광범위한 “보호주의”를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한 “신보호주의”는 개도국들을 중심으로 했던 기존의 “보호무역주의”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 2. 신보호주의 등장의 배경

신보호주의 등장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신보호주의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예측하고, 이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 저자는 신보호주의 등장의 배경을 크게 3가지 요인, 즉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와 개도국 노동공급의 폭발적 증가”, “정보통신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해외업무위탁의 증가”, “선진국 중간·중산층 붕괴와 정치경제”로 나누어 분석할 것이지만, 아래에 논의된 바와 같이 이 3가지 요인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 1)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와 개도국 노동공급의 폭발적 증가

앞서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경제는 GATT·WTO 체제를 중심으로 다자간 협상을 통하여 보호무역장벽을 낮추어 왔다. 또한, WTO 체제가 출범한 1995년 이후에는 특혜무역협정의 확대 등을 통하여 참여국들 간 보호무역정책의 제거 뿐 아니라 다양한 국내정책에 대한 협상을 통하여 직접투자, 노동의 보다 자유로운 이동 등 생산요소의 국가 간 이동을 보다 자유롭게 하는 변화들이 추진되어 왔다. 이러한 세계무역체제의 변화가 각국경제가 세계시장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생산 및 소비가 결정되는 세계경제의 글로벌화로 이어졌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와 더불어 신보호주의 등장의 배경으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는 세계시장으로의 폭발적인 개도국 노동공급 증가이다. 물론 개도국 노동공급의 폭발적 증가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중국경제의 글로벌화이지만, 수입대체산업화(import-substituting industrialization) 정책을 펴면서 세계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중남미 국가들과 인도 등 많은 노동력을 지니고 있는 개도국들이 1990년대 들어서면서 수출지향적산업화(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 정책으로 전환한 것 또한 개도국 노동공급의 증가에 큰 기여를 하였다. Deardorff and Park(2010)과 Park(2011)이 강조한 바와 같이, 수출지향적산업화 정책 등의 영향으로 자본집약적 중간재 수입이 용이해지면, 개도국 내부에서만 생산·소비되는 전통적 재화생산에 고용되었던 노동력이 수출 가능한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으로 이동하게 된다. 전통적 재화생산에 고용되었던 노동력이 모두 제조업 분야로 이동하는 완전한 산업화가 이루어지기까지, 개도국 노동공급의 제조업 분야로의 전환은 매우 탄력적(제조업 노동임금의 상승이 없어도)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공동시장(common market)인 EU가 동유럽 개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개도국 노동이 직접 선진국의 노동시장으로 이동한 경우도 있으나, 보다 큰 부분은 헤셔-올린(Heckscher-Ohlin) 이론이 강조하는 바와 같이 개도국이 생산한 노동집약적 재화에 노동력이 담겨 수출되므로 개도국 노동력이 직접 세계노동시장에 공급된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부분이다. 이러한 개도국 노동력 공급의 증가는 노동집약적 제품의 상대가격 하락을 의미하며, 이는 결국

선진국의 비숙련 노동에 지급되는 임금의 하락으로 이어진다. 물론, 완전고용을 가정하는 헉셔-올린 모형과는 달리 현실경제에서 이러한 변화는 노동집약적 재화를 생산하는 선진국 제조업 기업들의 해고 등을 통한 생산조절로 이어지고, 해고된 노동자들이 다른 산업으로 이동하여 재고용 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Autor, Dorn, and Hanson(2013a, 2013b)은 1990년부터 2007년까지 미국의 산업 및 고용관련 데이터와 미국의 국제무역 데이터를 이용하여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가 미국의 산업 및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다양한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들은 우선 노동의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의 변화에 대한 지역적 노출이 중국제품의 수입을 통한 지역적 노출과 서로 관련성이 적기 때문에, 미국의 노동시장에 미친 국제무역과 기술변화의 영향을 분리하여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감소한 미국의 제조업 고용의 4분의 1이 중국제품의 수입증가로부터 기인하였고, 지역 노동시장에서의 실업 증가, 노동시장 참여 감소, 그리고 임금 감소를 가져왔다.

## 2) 정보통신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해외업무위탁(Offshoring)의 증가

1990년대에 시작된 정보통신기술의 눈부신 발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다양한 분야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세계무역의 패턴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표준적인 헉셔-올린 모형은 각국이 최종재를 생산하고 이를 교역하는 것을 가정한 최종재 교역모형이다. 하지만 세계무역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왔고 기업 내(intra-firm) 중간재 교역이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매우 커진 상태이다.

중간재 교역증가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해외업무위탁의 증가라고 할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많은 단계를 거쳐야하는 생산프로세스와 관련하여 한 기업의 내부에서 혹은 한 국가 내에서 진행되던 생산프로세스 중 일부가 해외의 자회사 혹은 관련기업에 위탁되는 해외업무위탁이 증가할 수 있는데, 이런 해외업무위탁은 국가 간 중간재 교역의 증가로 이어진

다.<sup>8</sup>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무역과 관련하여 해외업무위탁의 증가는 종전에 선진국 기업의 내부 혹은 선진국 경제 내에서 이루어지던 생산프로세스 일부가 개도국으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개도국으로 이전되는 생산프로세스는 주로 노동집약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는 결국 선진국 내부의 비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개도국 노동공급의 폭발적 증가와 마찬가지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해외업무위탁의 증가 또한 결국 선진국의 비숙련 노동에 지급되는 임금의 하락 및 노동자들의 실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해외업무위탁의 증가는 해외직접투자의 증가로 이어지거나, 해외에 위치한 중간재 공급기업과의 수직적 그리고 상호의존적 분업관계를 발생시킨다는 의미에서 전통적인 무역이론을 통해 분석되기 힘든 성격의 무역을 발생시킨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성격의 중간재 교역의 증가는 앞서 II장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최적 무역협정의 형태가 무역정책에만 중점을 둔 낮은 수준의 협정에서 다양한 국내정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높은 수준의 협정으로 바뀌게 할 수 있다.

### 3) 선진국 중간-중산층의 붕괴와 정치경제(Political Economy)

산업화된 선진국들에서 지난 20~30년간 중간-중산층의 공동화(the hollowing out of middle class)가 진행된 것은 그동안 많은 연구들을 통하여 잘 알려진 사실이다.<sup>9</sup> 이러한 중간-중산층 공동화는 제조업의 자동화 진행 등 기술편향적 과학기술진보(skill-biased technological progress)가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지만,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국제무역을 통한 개도국 노동공급의 폭발적 증가 또한 적지 않게 영향을 주었다는 여러 연구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중간-중산층 공동화가 선진국의 정치 및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 무역 및 생산요소의 국가 간 이동과 관련한 정책에 어떤 영

8. 해외위탁업무에 관한 대표적인 논문으로는 Grossman and Rossi-Hansberg(2008)의 논문이 있다.

9. 중간-중산층 공동화에 대한 대표적인 논문들로는 Autor, Katz, and Kearney(2006), Goos and Manning(2007), 그리고 Goos, Manning, and Salomons(2014)의 논문이 있다.

향을 미치고 있는가는 신보호주의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무역정책의 결정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모형으로 가장 많이 알려지고 연구된 모형은 Grossman and Helpman(1994)의 보호무역 판매(protection for sale) 모형이다. 이 모형은 정치적으로 조직화된 수입경쟁산업들이 관세부과를 통해 자신들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로비를 경쟁적으로 하고, 정책결정자는 이러한 로비가 제공하는 캠페인 기부금과 경제전체구성원들의 후생을 모두 고려하여 산업별 관세를 통한 보호무역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모형이다. 이 모형은 한 국가내의 산업별 보호무역 수준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매우 유용한 모형이나, 신보호주의와 같은 보다 광범위한 보호무역주의의 흐름을 설명하는데 적합한 모형은 아니다.

신보호주의 등장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거경쟁(electoral competition) 모형인 중간선거권자(median voter) 모형이 유용하다고 판단된다. 무역정책결정에 대한 선거경쟁모형은 헤셔-올린 무역이론(노동·자본 2생산요소; 노동집약적·자본집약적 2재화 모형)에 근거한 Mayer(1984)의 모형이 최초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중간선거자의 무역정책에 대한 선호가 무역정책으로 반영되는 모형이다. 모든 선거권자가 동일한 노동을 갖고 있다고 가정하는 이 모형은 중간선거권자가 평균적인 자본을 갖고 있는 경우(예를 들면 완벽하게 소득이 평균화된 경우)에만 자유무역정책이 선택된다. 자본량이 상대적으로 많아 노동집약적 재화를 수입하는 선진국의 경우, 자본의 분배가 한쪽으로 치우쳐 중간선거권자의 자본량이 평균적인 자본량에 비해 작아질수록 이 중간선거권자는 더 높은 수준의 수입관세를 선호하게 되고, 선진국은 보다 높은 수준의 관세를 선택하게 된다.

스톨퍼-사뮤엘슨(Stolper-Samuelson) 정리를 통해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헤셔-올린 무역모형에서 선진국 수입관세의 증가는 선진국 노동소득의 실질적 증가(자본소득의 실질적 감소)를 가져오기 때문에 자본의 분배가 한쪽으로 치우쳐, 중간선거권자의 소득 중 자본 소득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중간선거권자는 노동집약적 재화에 대한 수입관세의 증가를 선호하게 되는 것이다. 이 이론은 Dutt and Mitra(2002)에 의하여 실증적으로 검증되었는데, 이 연구에 의하면 한국의 자본·노동 비율보다 높은 자본·노동 비율을 갖고 있는 국

가들(대부분 선진국들)의 경우 소득불평등이 높을수록 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Mayer(1984)의 중간선거권자 모형에 의하면, 선진국에서 진행된 소득불평등의 증가와 중간-중산층의 붕괴가 중간선거권자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선호, 특히 노동집약적 재화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선호로 이어져 선진국 정치권이 이를 반영한 정책을 선택하기 시작한 것으로 최근 보호주의의 흐름을 해석할 수 있다. 선진국의 중간선거권자는 비슷한 이유에서 반이민정책, 반해외직접투자, 혹은 반해외업무위탁 정책들 또한 선호할 것이고 이 같은 선호를 반영한 것이 선진국의 신자유주의라 할 수 있다.

### 3. 종합

신보호주의 등장의 배경으로 살펴본 3가지 요인들,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와 개도국 노동공급의 폭발적 증가”, “정보통신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해외업무위탁의 증가”, “선진국 중간-중산층 붕괴와 정치경제”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특히 앞의 2가지 요인이 3번째 요인으로 언급된 선진국의 정치, 특히 중간선거권자 선호의 변화를 통해 선거경쟁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1995년 출범한 WTO 체제는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특히 개도국들의 산업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선진국 시장으로 노동집약적 재화의 수출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고, 이는 선진국 시장에 비숙련노동의 공급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과 마찬가지로 영향을 주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눈부신 발전에 따라 선진국 기업 내부에서 이루어지던 생산프로세스의 일부분, 특히 노동집약적 부분이 해외업무위탁을 통하여 해외의 자회사 혹은 관련기업으로 재배치됨에 따라 선진국 기업들에 의해 선진국 시장에서 비교적 견고하게 요구되던 노동에 대한 수요도 대폭 감소하게 되었다. 물론, 무역정책 뿐 아니라 투자정책 등 다양한 국내정책 또한 협정의 대상으로 삼는 높

은 수준의 특혜무역협정의 증가는 이러한 해외업무위탁을 더욱 용이하게 하였을 것이다. 선진국 시장 내 비숙련노동의 수요·공급과 관련한 이러한 변화는 기술편향적(skill-biased) 과학기술의 진보와 함께 선진국 내의 중간·중산층의 급속한 붕괴와 소득불평등의 심화를 가져왔다. 이는 중간선거권자의 보호무역주의 및 반이민정책(개도국으로부터의 직접적 노동공급을 제한) 등에 대한 선호를 강화하여, 이러한 정책을 채택하는 정권이 선진국에 들어서기 시작한 것으로 신보호주의의 등장을 이해해 볼 수 있다.<sup>10</sup>

#### IV. 신보호주의와 세계무역체제에 대한 전망 및 결어

II장과 III장이 각각 세계무역체제의 발전과 신보호주의 등장의 배경을 이와 관련된 중요 연구들을 통하여 이해하려고 시도한 것이라면, IV장은 이에 근거하여 앞으로 신보호주의가 세계무역체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을 시도한다. 세계경제 및 각국의 정치에 영향을 주는 복잡한 변수들이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전망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따라서 정확한 전망은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II장과 III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세계무역체제의 발전과 신보호주의 등장의 배경에 대해서 국제무역·통상 및 정치경제학적 모형을 통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형들에서 강조하는 결정변수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에 대한 예상을 통해서 세계무역체제와 신자유주의의 미래를 전망해보고자 한다.

---

10. Autor, Dorn, Hanson and Majlesi(2016)는 2016년 미국대통령선거의 투표와 관련하여 군(county) 단위의 공화당 후보에 대한 투표의 증가(2000년과 비교)가 군 단위의 지역 노동시장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경쟁의 증가에 얼마나 노출되었는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을 보인다.



## 1. 신보호주의에 대한 전망

신보호주의에 대한 전망과 관련하여 중요한 변수는 선진국 중간선거권자의 보호무역주의 및 이민정책 등에 대한 선호이다. 물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이와 같은 대외정책 이외에도 많은 국내이슈가 존재하지만, 여러 선진국에서 대외정책과 관련된 이슈가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었고 이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선진국 중간선거권자의 선호는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되는가?

선진국 중간선거권자의 보호무역정책 및 반이민정책에 대한 선호가 강화된 원인이 선진국 중간·중산층의 급속한 붕괴 및 소득불평등의 심화일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불평등의 심화는 기술편향적 과학기술의 진보 및 개도국 노동과의 직접·간접적 경쟁의 격화에 따른 선진국 내 비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의 감소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기술편향적 과학기술진보 및 개도국 노동과의 경쟁에 대한 전망은 어떠한가?

과학기술의 진보를 정량화하여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과학기술진보의 기술편향성이라는 방향이 바뀔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제4차 산업혁명은 비숙련노동자뿐만 아니라 숙련노동자와 일부 전문직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의 진보는 소득불평등의 심화를 오히려 가속화시키고 중간·중산층의 붕괴 또한 심화시킬 수 있다.

과학기술의 진보와는 달리, 선진국 노동자의 입장에서 개도국 노동과의 경쟁이 앞으로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경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중국경제의 산업화(전통분야에 있던 노동력이 제조업분야로 흡수)가 거의 완성되면서 수년 전부터 중국경제 내 노동공급의 탄력성이 낮아졌고 이에 따라 노동 임금도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 인도와 같이 저임금 노동력이 풍부한 개도국들이 존재하고, 정보통신산업의 지속적 발전이 해외업무위탁을 증가시킬 것이기 때문에 개도국 노동과의 경쟁이 쉽게 약화되지는 않을 것이지만, 이 경쟁이 앞으로 크게 격화될 가능성이 높아보이지는 않는다.

만일 앞으로도 심해질 수 있는 선진국 내 소득불평등이 주로 기술편향적 과학기술진보에 의한 것이고 개도국 노동과의 경쟁이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감소된다면, 보호주의정책에 대한 필요성 내지 선호 또한 앞으로 감소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아쉽게도 중간선거권자 이론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 앞서 III.2.3절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선진국 중간선거권자의 보호주의정책에 대한 선호는 중간선거권자의 자본량과 평균자본량의 차이가 커질수록 강화된다. 따라서 과학기술진보에 따라 소득불평등이 악화되면, 이러한 소득 불평등이 개도국 노동과의 경쟁 심화에서 기인하지 않더라도 중간선거권자의 보호주의정책에 대한 선호는 강화되게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자는 선진국의 신보호주의가 당분간 약화될 수 있는 가능성 보다 오히려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다른 변수가 있다면 선진국 소득재분배 정책의 변화이다. 선진국 중간선거권자의 보호주의정책에 대한 선호는 결국 소득불평등 정도에 의존하는데, 소득불평등은 소득재분배 정책 등을 통하여 정책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책변수라는 성격도 지닌다. 따라서 선진국들이 제4차 산업혁명 등의 과학기술진보에 대응하여 보다 공격적인 소득재분배 정책을 추진한다면 신보호주의를 약화시킬 수도 있으나, 미국의 경우 집권당이 추진하는 정책들이 오히려 이와는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선진국의 신보호주의가 약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된다.

## 2. 세계무역체제에 대한 전망

II장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GATT·WTO 체제는 상호주의 원칙 및 최혜국대우 원칙에 따른 다자간 협상을 통하여 전 세계적으로 높았던 무역장벽들을 성공적으로 낮추었고, 이러한 성공은 세계 경제의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였다. 비록 WTO 체제가 출범한 1995년 이후 시도되었던 새로운 다자간 협상인 도하 발전 라운드는 비록 실패로 귀결되었고 같은 기간 동안 특혜무역협정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었지만, 분쟁해결절차

(dispute settlement process)의 집행을 통해 WTO 체제는 여전히 세계무역체제의 유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sup>11</sup>

신보호주의의 등장은 WTO 체제와 특혜무역협정들로 구성된 세계무역체제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특혜무역협정의 확대는 TPP와 같이 무역정책 뿐 아니라 다양한 국내정책을 협정에 포함시킨 높은 수준의 메가 FTA 협상타결로 이어지면서 GATT·WTO 체제를 대체할 새로운 세계무역질서 구축이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전망도 있었다. 하지만, 미국의 TPP 탈퇴에서 보듯 신보호주의의 등장은 당분간 이러한 메가 FTA를 통해 새로운 무역질서가 구축될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미국·영국 등 선진국들이 중심이 된 신보호주의는 현재까지 특혜무역협정의 재협상이나 탈퇴 등 주로 특혜무역협정에 대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신보호주의가 특혜무역협정에 대해서만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강한 보호무역주의 및 반이민정책 등 생산물 및 생산요소의 국가 간 이동에 대해 부정적인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GATT·WTO 체제 또한 그 질서의 유지에 있어서 여러 가지 도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통 작은 숫자의 국가들이 참여하는 특혜무역협정과는 달리 WTO는 현재 164개국에 참여한 협정으로 그 탈퇴나 재협상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각국은 세이프 가드나 반덤핑 관세부과 등 다양한 비관세 장벽을 이용하여 WTO 체제 하에서도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할 수 있으며, 실제로 선진국들의 비관세 장벽 활용은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비관세 장벽이 정당한 이유에서 발동된 것이 아닐 경우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국가는 이 문제를 WTO의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해결하려고 할 것인데, 이러한 분쟁이 지나치게 많아지고 격화되면 WTO 체제 자체의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도 있다.

물론 세계무역체제에 대한 전망이 무조건 어두운 것만은 아니다. 비록 선진국의 소득분배문제가 악화되면서 신보호주의가 등장하였지만, 세계무역체제가 그동안 발전하고 유지되어왔던 이유는 2장에서 살펴본 GATT·WTO

---

11. 무역협정이행 및 분쟁해결에 대한 GATT/WTO의 역할에 대한 연구들에 대한 최근 서베이(survey)로는 Park(2016)의 북 챗터가 있다.

체제 및 특혜무역협정이 갖는 순기능 때문이다. 교역 상대국에 부정적 외부성(negative externality)을 발생시키는 무역정책과 일부 국내정책에 대한 일방적 결정을 지양하고, 이에 대한 협상을 통하여 참여국들 모두 보다 큰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세계무역체제의 순기능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특화된 중간재 교역의 증가는 높은 수준의 협정에 대한 필요성을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세계무역체제에 대한 전망과 관련하여 논할 수 있는 또 다른 긍정적인 요소는 신보호주의가 선진국들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2017년 1월 세계경제포럼에서 중국 시진핑 주석의 기조연설을 통해 나타난 바와 같이 중국을 비롯한 개도국들의 경우 보호무역주의보다는 세계무역체제를 유지 혹은 발전시키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Mayer(1984)의 모형에 따르면 소득불평등문제가 심해지는 경우에도 노동집약적 재화생산에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가 있는 개도국의 중간선거권자는 자본집약적 재화의 수입에 대해 수입보조금을 선호하게 되는 등, 앞으로 개도국의 보호무역주의를 강화시킬 정치경제학적 요인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sup>12</sup> 따라서, 세계무역체제를 유지 혹은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이들 개도국들의 역할이 중요해진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

12. 개도국의 중간선거권자가 자본집약적 재화의 수입에 대해 수입보조금을 선호할 수 있다는 Mayer(1984) 모형의 함의는 이모형의 실증적 유용성에 대한 비판의 이유가 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Mayer(1984)의 작은 국가 가정(small country assumption)을 완화하여 각국이 보호무역정책을 통해 교역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가정하는 Dhingra(2014)의 연구에 따르면, 중간선거권자 모형하에서도 모든 국가가 양(positive)의 관세율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다. 더 나아가 Dhingra(2014)는 1993년부터 2004년까지 35개국 자료를 이용하여 일반화된 중간선거권자 모형의 실증적 유용성을 검증하였다. 물론, 투표 등의 민주적인 절차를 통한 정권의 선출이 일반화 되어있는 많은 개도국의 경우 중간선거권자 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대중의 선호를 무시한 정책을 펴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간선거권자 모형은 여전히 유의성을 가질 수 있다.

### 3. 결어

본 논문은 세계무역체제의 발전과 신보호주의 등장에 대하여 기존의 연구들이 어떤 해석을 제공할 수 있는가에 중점을 두고 작성되었다. 본 논문은 세계무역체제와 신보호주의 등장의 배경을 경제적 혹은 정치경제학적 변수들을 통해 이해함으로써, 이러한 변수들에 근거하여 신보호주의와 세계무역체제에 대한 전망을 시도하였다.

세계경제 및 각국의 정치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은 실제로 매우 복잡하고 시시각각 변한다. 본 논문에서 시도된 전망은 기존 연구들이 제공하는 모형에 기반하여 가설을 세우고 예측한 것이기 때문에, 세계무역체제와 신보호주의의 미래에 대한 전망과 관련하여 이러한 가설에 대한 검증 및 보다 정치한 모형의 개발 등 앞으로 많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sup>13</sup>

투고일자: 2017-05-25 심사일자: 2017-06-02 게재확정: 2017-06-09

### 참고문헌

- Antràs, P. and R. Staiger. 2012a. "Offshoring and the Role of Trade Agreements." *American Economic Review*, 102(7): 3140-3183.
- Antràs, P. and R. Staiger. 2012b. "Trade Agreements and the Nature of Price Determin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102(3): 470-76.
- Autor, D., D. Dorn, and G. Hanson. 2013a. "The Geography of Trade and Technology Shocks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Economic Review*, 103(3): 220-225.
- Autor, D., D. Dorn, and G. Hanson. 2013b. "The China Syndrome: Local Labor Market Effects of Import Competition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Economic Review*, 103(6): 2121-2168.
- Autor, D., L. Katz, and M. Kearney. 2006. "The Polarization of the U.S. Labor

---

13. 세계무역체제에 대한 향후 연구의 방향과 관련하여 Bagwell and Staiger(2016)가 편집한 *Handbook of Commercial Policy*는 훌륭한 길라잡이가 될 수 있다.

- Market.”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and Proceedings*, 96(2): 189-194.
- Autor, D., D. Dorn, G. Hanson, and K. Majlesi. 2016. “Importing Political Polarization? The Electoral Consequences of Rising Trade Exposure.” Working Paper.
- Bagwell, K. and R. Staiger. 1999a. “An Economic Theory of GATT.” *American Economic Review*, 89(1): 1162-1182.
- Bagwell, K. and R. Staiger. 1999b. “Regionalism and Multilateral Tariff Cooperation.” In J. Piggot and A. Woodland (eds.), *International Trade Policy and the Pacific Rim*, 157-190. Basingstoke: Palgrave and Macmillan.
- Bagwell, K. and R. Staiger. 2001. “Domestic Policies, National Sovereignty, and International Economic Institution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6(2): 519-562.
- Bagwell, K. and R. Staiger. 2011. “What Do Trade Negotiators Negotiate about? Empirical Evidence from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101(4): 1238-1273.
- Bagwell, K. and R. Staiger (eds.). 2016. *Handbook of Commercial Policy*. Amsterdam: Elsevier.
- Bagwell, K., C. Bown, and R. Staiger. 2016. “Is the WTO Passé?”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54(4): 1125-1231.
- Broda, C., N. Limao, and D. Weinstein. 2008. “Optimal Tariff and Market Power: the Evidence.” *American Economic Review*, 98(5): 2032-2065.
- Deardorff, A. and J.-H. Park. 2010. “A Story of Trade-induced Industrialization.” *International Economic Journal*, 24(3): 283-296.
- Dhingra, S. 2014. “Reconciling Observed Tariffs and the Median Voter Model.” *Economics and Politics*, 26(3): 483-504.
- Dutt, P. and D. Mitra. 2002. “Endogenous Trade Policy through Majority Voting: An Empirical Investiga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58(1): 107-133.
- Goos, M. and A. Manning. 2007. “The Rising Polarization of Work in Britain.”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9: 118-33.
- Goos, M., A. Manning, and A. Salomons. 2014. “Explaining Job Polarization: Routine-Biased Technological Change and Offshoring.” *American Economic Review*, 104(8): 2509-2526.
- Grossman, G. and E. Helpman. 1994. “Protection for Sale.” *American Economic Review*, 84(4): 833-850.
- Grossman, G. and E. Rossi-Hansberg. 2008. “Trading Tasks: A Simple Theory of Offshoring.” *American Economic Review*, 98(5): 1978-1997.
- Kennan, J. and R. Riezman. 1990. “Optimal Tariff Equilibrium with Customs Unions.”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23(1): 70-83.
- Krugman, P. 1991. “Is Bilateralism Bad?” In E. Helpman and A. Razin (eds.), *International Trade and Trade Policy*, 9-23. Cambridge, MA: MIT Press.

- Maggi, G. and A. Rodriguez-Clare. 1998. "The Value of Trade Agreements in the Presence of Political Pressur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6(3): 574-601.
- Maggi, G. and A. Rodriguez-Clare. 2007. "A Political-Economy Theory of Trade Agreements." *American Economic Review*, 97(4): 1374-1406.
- Mayer, W. 1984. "Endogenous Tariff Form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74(5): 970-987.
- Ornelas, E. 2005. "Rent Destruction and the Political Viability of Free Trade Agreement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0(4): 1475-1506.
- Ossa, R. 2011. "A 'New Trade' Theory of GATT/WTO Negotiation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19(1): 122-152.
- Ossa, R. 2012. "Profits in the 'New Trade' Approach to Trade Negotiations." *American Economic Review*, 102(3): 466-469.
- Park, J.-H. 2011. "Trade-induced Industrialization and Economic Growth." *International Economic Journal*, 25(3): 513-545.
- Park, J.-H. 2016. "Enforcement and Dispute Settlement." In K. Bagwell and R. Staiger (eds.), *Handbook of Commercial Policy, Volume 1B*, 3-67. Amsterdam: Elsevier.
- Richardson, M. 1993. "Tariff Revenue Competition in a Free Trade Area." *European Economic Review*, 39(7): 1429-1437.
- Sykes, A. 2016. "Legal Aspects of Commercial Policy Rules." In K. Bagwell and R. Staiger (eds.), *Handbook of Commercial Policy, Volume 1B*, 265-332. Amsterdam: Elsevier.

## New Protectionism and World Trade Regime

Jee-Hyeong Park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explores possible bases for the progress of world trade regime and the rise of new protectionism based on existing studies in international trade and commercial policy area. Using analytical frameworks of these studies, the paper then discusses what we can expect for the future of world trade regime and new protectionism.

Keywords: new protectionism, world trade regime, WTO, GATT,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terms-of-trade theory, median voter theory